

격동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



정 구 종
동서대 석좌교수



▲ 미·중 간에 긴장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남중국해의 남사열도. 한·일도 공동대응을 미국으로부터 압력받고 있다.

동아시아는 21세기 들어 세력 재편기를 맞고 있다. 중국은 2014년 이전까지 10여년동안 매년 10%가 넘는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하여 군비를 증강하고 「해양 강국」을 선언하면서 남중국해를 내해(內海)화하려하고 있는 등 해양진출을 통한 군사적 프레젠텐스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4년 5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아시아 신

뢰양성조치회의(CICA)」서미트에서 의장직을 맡은 가운데 「新 아시아주의」 전략을 세계를 향해 선명히 발신하였다.

중국의 이 같은 군사적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천명하고 2020년까지 해군 및 공군 병력의 60%를 아·태지역에 배치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중국을 겨냥한 봉쇄전략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기지화를 서두르는 등 미·중 대립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인보위기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안보상황 급변에 따른 긴장 극복을 위해
한·미, 미·일 등 2국간 동맹 국가 상호 협력 필요

중국의 「굴기」에 어느 나라 보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일본은 미·일 가이드 라인의 재조정 등 미·일 방위, 안보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대 중국 봉쇄작전에 사실상 가담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9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관련법제를 성립시키고 앞으로 자위대가 동맹국 미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독자적으로도 해외에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길을 텃다. 일본의 신안보법제에 따른 자위대 해외활동의 현실적인 과제로서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대립상황에 자위대가 미군을 도와 출동하는 문제 및 한반도 유사시와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제 4차 핵실험 도발(2016년 1월 6일)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2월 7일)에 미국·일본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국제법 및 국제규범 위반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요청중인 대중국 견제를 위한 대응에 참여하는 문제 외에도 북한 핵도발 억제에 향한 한·미·일 공동대응을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동아시아의 안보상황 급변에 따른 긴장이 조성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미·일 등 미국을

**불안정한 과도기에 있어 한반도 정세의 동향은
대국간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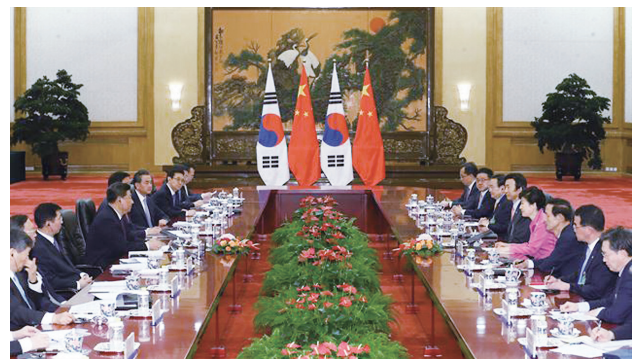
중심으로 한 2국간 동맹관계 국가들이 상호 협력속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3국의 정부관계자를 비롯하여 국제정치학자 등 전문가들 사이에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言論 NPO」가 주최한 인터넷 중계 정책토론회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적인 질서구성과 일본의 역할」을 테마로 2016년 1월 29일 언론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토론에 나선 미야모토 유지(宮本雄二) 전 주중 일본대사는 2016년의 세계는 「중국의 대두에 의해 미국중심의 국제질서의 기초가 침식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중심의 세계적 질서가 커다란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인들이 「중국중심의 아시아」라고 하는 멘탈리티를 갖기 시작한 것이 동아시아 안전보장의 환경정비에 커다란 영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토론자인 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 게이오대학 교수도 2016년은 「구미 중심의 국제질서가 중국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는 질서변동기로서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질서구축 움직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중요한 국면에 와 있다」고 말하고 「그 같은 불안정한 과도기에 있어 한반도 정세의 동향은 대국간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위성 방위심의관 출신의 도쿠지 히데시(徳地秀士)는 「이 지역의 안전보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허브 앤드 스포크(Hub and Spoke)에 의해 성립되고 있으므로 작년에 일본에서 성립된 안보법제는 미국뿐 아니라 타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더욱이 파워 밸런스를 생각하는 위에서는 일정한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인식의 공유, 질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새로운 안보법제를 미국과의 협력뿐 아니라 타국과의 협력에도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안정적인 질서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2015년 9월 북경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장면

소에야 교수는 앞으로의 일본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안전보장 문제는 한반도 정세라고 지적하고 「안보환경이 불안정 할수록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의 중요성은 높아질 것이므로 정책 협의에 있어서의 한·일간의 공통 항목을 명시적으로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言論NPO의 이 토론회는 2015년 남중국해 미·중대립과 일본의 안보법제 성립 과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 등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새로운 안보환경의 변화에 한·미·일·중 등 관계국간에 어떻게 대응해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처음으로 논의한 정책 대화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토론자들의 발표에서 거론된 안보상황 진단과 안정적 질서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의 실현여부가 앞으로의 동아시아 안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작년 일본의 안보관련 법 성립을 경계하면서도 한

반도 안보를 위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지속해 왔다. 특히 2016년 1월 북한에 의한 제4차 핵실험 강행 및 장거리 유도탄 광명성 4호 발사 등 직면한 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안보협력의 기반 위에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확고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한·일 안보협력문제에도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국방·안보전문가들뿐 아니라 중도·보수 성향의 메이저 신문의 논평과 사설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안보법제 성립과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에 따른 남중국해 사태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은 한·미·일 3국이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재촉하고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 사태에 대해서는「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한하는데에 한·미·일 3국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이 2015년의 한·미·일 정상회담 및 11월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에 대해서는 안보법제를 설명하기 위해 방한한 나카타니 겐(中谷 元) 일본방위상과



▲ "中, 남중국해에 미사일 배치"

(AFP=연합뉴스)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어명 시사군도·베트남명 호앙사 군도)에 속한 우디섬(중국어명 웅싱다오)의 항공사진. 2012년 7월 27일 촬영한 것이다. 중국이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 속한 우디섬에 최근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정부는 이런 보도 내용에 대해 "오래전에 설치했던 방어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남중국해에 필요한 방위시설을 배치하겠다고 사실상 '인공섬 군사기지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lkm@yna.co.kr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2015년 10월)에서 자위대가 타국의 영토에서 활동하는 문제는 반드시 사전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활동문제에 대한 한·미·일 3국간의 가이드라인 작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보현안에 대한 대화와 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그 동안 중단되어 왔던 한일 방위교류 및 협력의 부활이 한일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되었다. 한·일 양국은 방위관계의 「인적 교류, 부대의 교류, 교육·연구교류 등 다양한 방위교류를 강화하며, PKO, 소말리아 해적 대처활동, 인도적 지원, 재해구난활동에 있어서 협력 해 나간다」는데 합의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핵 문제·통일문제에 미·일동맹은 귀중한 안보자산

한·일 안보협력 문제는 한·일간에 역사인식문제가 현안이 되어 있는 동안에는 정부가 신중한 대응을 유지해 왔고 미디어도 여론을 감안하여 보도를 억제해 왔다. 그러나 안보 전문가와 연구기관에서는 그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일본과의 안보협력에 전략적 사고에 입각해서 전향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한국 국방연구소·KIDA보고서 2013년)는 지적과 함께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과의 전략적 공조는 대단히 중요하며 북한 핵 문제·통일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일본의 지원과 미·일동맹은 귀중한 안보자산』이라는 제언도 제기되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KRIS), 「2015년 동아시아 전략평가」)

한반도 유사시의 한일협력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으로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협력사안이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거주 또는 주재하는 외국인의 탈출문제가 발생한다. 탈출지는 일본, 탈출수단은 함선, 소형선박, 항공기 등이 될 것이며 그 때 한일협력은 불가결하게 된다』고 전 방위청 방위연구소 총괄 연구관 다케사다 히데시(타쿠쇼쿠 대학 특임교수)는 말했다. 다케사다 교수는 남북한간에 군사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은 7개소

의 주일 미군기지를 이용하여 발전하게 된다고 밝히고 주일 미군의 한반도 투입시에는 한·미·일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연적임을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은 3년 6개월만의 정상 회담을 개최 (2015년 11월 2일)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한·일 및 한·미·일이 안보분야에서 긴밀히 연계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가운데)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왼쪽)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대화하고 있다.

북한 제4차 핵실험 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체제의 확고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

2016년 1월의 북한 4차 핵실험과 2월의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 등 북한에 의한 잇따른 군사적 도발은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예견하듯이 한·일관계가 정상화하고, 또한 안보협력면에서도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동아시아 지역 안정을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다.

북한의 붕괴 시에 핵을 안전하게 제거 하는 문제와 치안유지를 위해서는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조 아래 부족한 병력확보를 위해 제 3국과의 협력문제도 검토될 수 있다고 미국 랜드(RAND) 연구소의 부루스 버넷 박사는 최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북한의 붕괴와 우리의 대비』, 한국안보문제연구소, 2015년)

안보와 대일본 역사문제의 Two Track을 하나로 수렴하는 작업이 현실의 문제

한일안보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역사문제와 분리해서 접근한다는 Two Track 전략이었다. 한·일간의 역사 문제는 아베 수상의 「전후 70년 담화」(2015년 8월 14일) 및 일본군 위안부문제 타결을 위한 한·일 외무장관 회담(2015년 12월 28일)합의로 큰 장애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따라서 「안보」와 「역사문제」의 Two Track을 하나로 수렴하는 작업이 현실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제 역사인식의 입장차이로 격리되었던 안보 문제에 대한 거리를 좁혀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있다.

일본은 아베 수상의 제2차 집권 후에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치·경제·안보·사회 등 각 분야에서 변화의 양상들이 차츰 선명해지고 있다. 아베 수상이 제창한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이 현실화 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이 같은 변화를 예의 주시해 가면서 상호 협력해 갈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미·중간의 대립의 심화가 가져올 안보정세의 변화에 한국과 일본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일의 공동대응이 현실의 안보과제로서 절실히 지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여서 한·일 양국의 협력과 상호「윈·윈」관계를 이룩해 나아가도록 함께 노력해 나아가는 것이 21세기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하겠다.

필자 약력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고문
전 동아닷컴 대표이사 사장
전 동아일보 이사, 편집국장, 동경지사장